

軍 작전일지·기무사 존안자료 ... '5·18 발포명령 상자' 열릴까

문대통령, 5·18 진상조사 지시...국방부 특별조사단 활동

헬기사격·전투기 출격 대기 규명 위해선 기밀해제 필수

국회 계류 진상조사특별법 9월 정기국회서 통과 시켜야

문재인 대통령이 19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공군 전투기 출격 대기 명령 여부와 전일빌딩 헬기 기총소사 사건 등에 대한 진상 조사를 지시함에 따라 그동안 묻혀 왔던 5월의 진실이 밝혀질 것인지 주목된다. 5·18 진상 규명은 광주에 눈물을 닦아주는 것을 넘어 시대의 아픔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국민 통합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국민통합 원동력 될 것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문 대통령이 23일 공군 전투기의 출격대기 명령 여부와 광주 전일빌딩 헬기 기총소사 사건에 대한 특별조사를 지시한 것은 광주 민주화운동의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겠다는 평소의 의지가 반영했다는 평가다. 실제로 지난 달 24일 문 대통령은 이낙연 총리에게 5·18 진상조사를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차원의 진상조사위가 법적 체계를 거쳐 출범하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만큼 행정 명령 등을 통한 진상조사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는 것이다.

특히, 문 대통령이 정부 차원의 5·18 진상 규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당시 공군 전투기 조종사들이 전투기에 공대지 폭탄을 장착한 채 출격을 대기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는 이날 특별 지시를 이끌어 낸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전두환 전 대통령의 회고록 등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폄훼와 왜곡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에도 진상조사위 설치

◇진상조사 급물살=문 대통령이 이날 다시 한 번 진상규명 의지를 밝힌 만큼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진상규명을 위한 후속조치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당장 국방부에 특별조사단이 꾸려진 가운데 정부 내에도 진상조사위원회가 설치될 예정이다.

진상조사위원회는 국회에 계류돼 있는 5·18 진상조사 특별법의 처리와 함께 발족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무총리실에서는 법적인 토대 위에 진상조사위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일단 진상조사 특별

법은 국회 본회의 참석 의원의 과반 찬성이면 통과된다는 점에서 민주당과 국민의당의 공조를 통해 9월 정기국회 처리가 가능하다. 다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특별법 처리에 부정적 입장이라는 점에서 본회의 상정까지 상당한 진통도 예상된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자 5·18 기념사를 통해서 재확인한 5·18 정신의 헌법전문(前文)에 담은 문제도 개헌논의와 함께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

5·18 민주화운동 진상 규명 특별법은 물론 5·18 역사 왜곡에 대한 처벌법 등의 처리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이다. 여기에 아시아문화전당의 옛 전남도청 원형보존 사업 등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특별조사단 활동은=국방부 특별조사단은 그동안 5·18 민주화운동 진상 규명의 걸림돌로 작용했던 당시 작전·상황일지 등 군 관련 기록들에 대한 비밀해제도 추진하기로 했다. 공군 전투기 부대 출격 대기나 헬기 기총소사 등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당시 상황, 작전 일지, 국군기무사령부가 보관하고 있는 존안 자료 등에 대한 기밀해제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문서 확인·증언 위주로 조사

이를 위해 국방부는 국방차관이 위원장인 군사기밀보호심의위원회를 열어 당시 기밀로 분류된 자료들을 공개가 가능한 문서로 전환하는 절차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국방부 노수철 법무관리관은 조사단 활동과 관련, "5·18 관련 문서 확인 작업과 관계자 증언이 위주가 될 것"이라며 "기무사 존안 자료도 당연히 확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전남대학교 5·18 연구소는 1980년 5월 28일자 계엄 상황일지에 광주에 파견된 헬기 등 군 항공기 16대의 복귀 보고기록이 남아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군은 5·18 당시 항공작전일지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지난 2007년 국방부 과거사위원회 조사에서도 시위대에 발포를 최종 명령한 사람에 대해서는 군내에 관련 문서가 없고 전두환 씨 등 관련자들이 진술을 기피해 끝내 규명하지 못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문대통령 헬기 사격 흔적 확인

지난 3월 20일 당시, 대통령선거 후보자 신분이었던 문재인 대통령이 광주시 동구 금남로 옛 광주일보 사옥이었던 전일빌딩을 찾아 헬기 사격 흔적을 둘러보고 있는 모습.

전일빌딩 헬기사격은?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특별조사를 지시한 '전일빌딩 헬기 기총사격 의혹'이 주목받고 있다.

광주시 동구 금남로에 있는 전일빌딩(옛 광주일보 사옥)은 광주의 랜드마크이자 '호남 언론의 1번지'로서 5·18민주화운동 등 현대사 현장을 지켜온 대표적 공간이다. 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시민군이 마지막까지 항쟁했던 건물이기도 하다.

전일빌딩이 새롭게 주목받은 것은 고(故) 조비오 신부 등이 증언한 헬기 기총소사를 뒷받침하는 총탄이 무더기로 발견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5·18기념재단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현장 조사를 통해 전일빌딩 10층 내부에서 총탄 흔적 150여곳

조비오 신부 등 기총소사 목적 증언 국과수 "170여 탄흔 헬기에서 난사"

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추가 조사에서도 27개가 천장 내부에서 발견됐으며 건물 후면에서는 1980년 5월 27일 새벽 도청진압작전에 나섰던 공수부대와 교전을 한 시민군들이 쓴 카빈 소총 탄흔도 처음 확인됐다.

특히 국과수가 법안검정서를 통해 "10층 탄흔은 정지비행 상태에서 헬기 사격에 의한 것이 유력하다"고 발표함으로써 그동안 제기된 각종 증언을 뒷받침했다.

당시 김동환 국과수 총기안전실장은 "탄흔이 있는 자리를 분석했을 때 전일빌딩 10

층보다 높은 위치에서의 사격이 유력하다"며 "금남로 상공에 헬기가 호버링(hovering·정지비행) 상태로 떠 있었고, 탑승한 군인들이 거처돼 있던 기관총을 좌우로 돌리면서 사격했다고 보는 게 과학적으로 맞다"고 설명했다. 또 "10층 내부에서 확인된 부채꼴 모양의 탄흔 분포를 보면, 소총병이 총기를 들고 단장을 갈아 끼우며 쏘는 생길 수 없는 구조"라고 덧붙였다.

국과수 법안검정서와 김 실장의 발언을 종합하면 전일빌딩 10층 건물 내부에서 확인된 170여 점의 탄흔은 UH-1 헬기 양

쪽 문에 거치된 M 60 기관총에 의한 난사의 흔적이 명백하다. 계엄군이 전일빌딩에 숨어있던 시민군을 향해 헬기에서 기관총을 난사했다는 새로운 사실이 과학적 연구결과로 확인된 것이다. 이는 고(故) 조비오 신부가 지난 1989년 국회에서 열린 5·18 진상규명 청문회에서 "헬리콥터가 총을 쏘는 것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것을 뒷받침하는 결과였다.

국과수 검정결과 발표와 더불어 전일빌딩 헬기사격 의혹은 규명해야 할 광주의 진실 리스트에 올랐다. 하지만 군당국은 "헬기 사격은 없었다"고 이를 부인해 발포명령자 등에 대한 진상규명 요구는 분절했다.

광주시는 최근 5·18민주화운동 당시 시민군이 마지막까지 항쟁했던 전일빌딩을 5·18 사적지 제28호로 지정했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5월 단체 "문대통령 지시 환영...국방부 의지 있다면 성과 낼 것"

말했다.

김후식 5·18부상자회장은 "대통령이 5·18에 관심을 가지고 조사 지시를 내린 점은 고맙다"며 "하지만 발포명령자 등 진상규명이 첫번째인 상황에서 전체 조사에 차질을 빚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옛 전남도청 원형복원을 촉구하는 범시민단체위원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전두환 신군부의 잔인함에 치가 떨린다"

며 "37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5·18 실제적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절실한 이유"라고 호소했다.

윤장현 광주시장도 "5·18 당시 전투기 출격대기 명령과 전일빌딩에 대한 헬기 기총사격에 대해 국방부 장관에게 특별 조사를 지시한 것에 대해 150만 광주시민과 더불어 감사의 뜻을 전하며 환영한다"고 밝혔다. 윤 시장은 이어 "대통령이 5·18민주화운동 37주년 기념식에서 정의

와 상식이 무너진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겠다는 강한 의지와 함께 '오월정신을 헌법으로 계승하겠다'고 약속했고, 오늘 또 다시 '광주'에 힘을 실어주셨다"고 덧붙였다.

광주시의원들도 "5월 진상규명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며, 윤 국군의 하나 된 뜻과 의지로 바로 세워야 할 역사다"면서 "국방부에서는 관련 군사작전 등 기록물을 중심으로 진상을 밝히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광주일보 65주년 연중 캠페인 | 빈병, 반환하고 환분받아요!

빈병기보증금 상담전화 1522-0082
www.kora.or.kr

빈병 반환으로 환경 살리고! 보증금 받고! 빈병기 보증금 제도

소비자가 유리병으로 된 소주, 맥주 등을 마시고 소매점에 빈병을 반환하면, 보증금을 돌려받는 제도로 빈병기의 회수 및 재사용을 촉진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2017년 1월 1일 생산된 제품부터 **빈병기 보증금이 인상됩니다**

면적 150% 확대 색상 변경

[인상 전] 40원 [인상 후] 100원

대상용량	규격	2016. 12. 31. 까지 출고된 빈병(색상·면적) 기준	2017. 1. 1. 부터 출고되는 빈병(색상·면적) 기준	비고
재활용법 시행령 제17조 조항에 따른 제품	190ml 미만	20원/개	70원/개	소형 마-라이 등
	190ml 이상 400ml 미만	40원/개	100원/개	소주, 맥주(소형), 청량음료 등
	400ml 이상 1,000ml 미만	50원/개	130원/개	맥주(대형) 등
	1,000ml 이상	100원 이상 300원 이하/개	350원/개	대형 청주 등

! 2016년 12월 31일 이전 생산된 제품은 2017년 1월 1일 이후에도 **인상 전 보증금으로 반환**됩니다. 라벨이 훼손되거나 이탈되어 보증금액 확인이 불가능한 제품은 인상 전 보증금으로 반환됩니다.

환경부

한국순환자원 유통지원센터

보해양조